

#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(新)경제협력 방안 모색

**한바란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중동팀 부연구위원  
brhan@kiep.go.kr

**이시욱**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
siwookl@mju.ac.kr

**최필수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중국팀 부연구위원  
pschoi@kiep.go.kr

**손성현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중동팀 연구원  
shson@kiep.go.kr

**전혜린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아프리카팀 연구원  
hljeon@kiep.go.kr

**윤서영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중동팀 전문연구원  
syyun@kiep.go.kr

**박재은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
중동팀 연구원  
jepark@kiep.go.kr

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2011년 초 중동 시민들은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의 심화,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증가율과 학력 증가율로 인한 높은 청년 실업률, 부패와 독재 등에 반발하여 반정부시위를 벌임.
  - 튀니지, 이집트, 리비아, 예멘에서는 장기독재정권이 축출되었으며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
  - 바레인에서는 종파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종파간의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 발발
-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한 중동지역 경제협력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존 대중동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
  - 교역과 투자 환경은 정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(신)정부가 내놓는 특정 방향의 대내·외 경제정책으로 인해 변화함.
  - 또한 중동지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·일본·중국·프랑스 등의 최근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경제협력환경에 영향을 끼침
- 특히 △ 2011년 정치 변동 정도 △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의 심각성(사회불안정도) △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, 리비아, 이집트 등을 선정하여 사례연구 수행
  - 정치변동 정도가 크거나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의 정도가 큰 국가는 협력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주목할 근거가 되며, 그중에서도 우리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한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
  - 빈곤, 실업, 독재, 부패 등 아랍의 봄의 배경은 유사하였지만 전개 양상은 국별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, 구체적으로 국가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중동지역 정치 변동의 경제협력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또한 우리나라와 대상국가와의 지난 10년간 교역 통계를 바탕으로 상품보완도 분석을 통해 유망 교역 품목을 선정하고 각국의 경제개발 계획과 현재 수요를 바탕으로 유망 투자품목 선정

## 2. 조사 및 분석 결과

### 1) 대중동 협력환경

- 아랍의 봄을 계기로 정치화된 국민과 다양한 정치 세력 및 신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불안한 정세가 지속됨.
-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 각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공공부문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민 근로자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중임.
  - 정치 변동을 겪었다고 해서 각국의 경제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산업다각화, 민간부문 개발, 인프라 구축, 인적자원 개발 등 정부 주도 경제개발 전략의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함.
  - 의료·보건, 교육, 공공교통 등 공공재이면서 그 변화가 쉽게 체감 가능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급증하는 등 정치변동을 겪은 각국의 현 정부는 자국민의 민생 안정에 직결된 지출을 늘려 존재의 당위성을 증명하려고 함.
- 각종 민생안정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2011년 민주화 혁명 발발 이후 2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현재 그 범위와 강도는 다르지만 실업, 부패, 물가 등 불안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음.
  - 중동 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다각화와 민간 부문 활성화 정책은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함.
- 과거 다른 지역의 민주화과정에서 보았듯이 정치 변동 이후 정부의 적극적 부패 척결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패 수준은 개선될 것이나 부족주의에 기반한 뿌리 깊은 정실자본주의는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됨.
  - 이집트와 리비아의 예에서 보았듯이, 정권은 바뀌었을 수 있으나 이들 국가를 떠받치고 있던 경제 구조와 주요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효하며, 새롭게 부상한 정치 권력층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해 기존 경제 권력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.
-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지역 전반의 지역주의 강화현상이 보임.
  - 아랍의 봄 발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걸프 왕정국가들은 역내 정세 안정을 위해 비산유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Gulf Union의 창립에 대해 논하기 시작함.
  - 물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학일 가능성도 있으나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과거보다 GCC의 결속

력이 강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, 주변국 역시 하나의 단위로써의 GCC를 단순한 외교적 편의가 아닌 협력 필요 대상으로서 인식하게 되었음.

- 2011년 7월 중국은 GCC와 “중국과 GCC 국가간 경제·무역·투자·기술협력 등에 관한 협정”을 체결
- 2012년 1월 일본은 일-GCC 전략대화각서에 서명하여 각료급 연례회의를 통해 정치·외교·경제(무역, 투자, FTA)·에너지·문화·교육·과학연구·보건·환경 등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합의
- 2012년 3월 미국은 GCC와 장관급의 미-GCC 안보협력 포럼을 신설

● 북아프리카 공화정 국가들도 정권이 바뀌면서 유럽, 중국, 미국 등 과거의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어 문화와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인접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임.

- 최근 리비아가 튀니지에 처음으로 증여한 2억 달러의 원조는 이러한 현상의 일면을 보여줌.

## 2) 사우디 협력 환경

● 아랍의 봄 진행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권력 독점 및 이양 문제, 시아 세력과 여성에 대한 억압, 높은 청년층 실업률과 주택난 등, 내재되었던 다양한 정치·경제적 불안요소로 인해 정치변동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었으나, 사우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시위 진압을 통해 시위의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함.

● 2011년을 기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교육, 보건·의료 등, 공공 서비스와 전력·도로·주택·공공교통 등,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기회가 급증

- 역내 민주화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GDP의 19%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공부문 임금인상, 고용확대, 실업수당지원, 주택제공 등에 지출할 것을 발표

-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다각화, 인력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약속

- 2012년에는 전해보다 19% 증가한 정부지출 계획안을 발표, 국방 및 치안 부문, 교육훈련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움.

●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프로젝트 수주 등의 비즈니스 기회는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, 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는 아직 불확실함.

- 일례로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화정책인 니타카트(Nitaqat)제도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며

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의 최저임금까지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고용 비용의 증가는 고스란히 활동 기업이 떠안게 됨.

- 한편, 부패의 개선과 행정 절차의 투명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스폰서십 제도의 폐지 혹은 대체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- 원유 수급 안정화와 역내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임.

- 중동 민주화 혁명 이후 미국은 중동 안보협력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확대하는 중임.
- 일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‘일본·사우디아라비아 산업협력 프레임워크’와 ‘ODA 졸업국과의 유상 기술협력’의 체계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협력 외교의 기반을 공고화하는 중
-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내정불간섭원칙을 지키며 에너지부문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
  - 특히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, 교역, 투자, 인프라, 과학기술, 금융, 안보, 법집행 등 전 분야를 포괄하여 협력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.

### 3) 리비아 협력 환경

- 2011년 카다피 축출 후 리비아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새로운 중앙 정부가 구성되는 중이나 지방 소도시에 대한 군·경찰의 장악력이 약해 소규모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
- 무엇보다도 리비아 중앙 정부와 각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미흡함.
- 2013년 의회 및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치루어지고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내전으로 중지되었던 각종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경제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해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임.

- 한편, 리비아 정부는 현재 원유 수출 재개와 동결 해제된 해외자산을 기반으로 교육, 의료, 주택 등 전후 재건 및 사회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.

- 단기적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리비아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석유 생산의 안정화와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.

- 재건 및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리비아 정부는 외국인

투자자 허용 범위와 지분을 확대하였고 신용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음.

- 리비아 정권 교체는 리비아와 주요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절호의 기회임.
  - 과거 우리나라, 터키와 리비아 건설시장을 삼분하고 있던 중국의 리비아 내 입지가 현저히 약화되었음.
  - 카다피 시절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은 리비아와의 관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임.
  - 서방에 대한 리비아 내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인해 서방국가들이 신정부와 단기간 내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임.
    - 미국은 양자적 접근보다는 국제 공조체제 범위 내에서 對리비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.
    - 한편 프랑스는 예외로, 내전 당시 과도정부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외교로 현재 리비아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치·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.

#### 4) 이집트 협력 환경

- 2012년 12월 현재 이집트의 정세는 여전히 가변적으로 현재 신정부는 극심한 재정 적자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.
  -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역시 여전히 상승 추세이며 고실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고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등, 경제적 불안요인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.
  - 이와 더불어 신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여, 2012년 11월, 무르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후 이집트 전역으로 대규모 시위가 급속히 확산된 바 있음.
- 이집트 신정부의 경제개발 방향은 무바라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앞으로도 농업, 제조업, 석유·천연가스, 전력, 교통·인프라, ICT, 관광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회가 다양화될 전망이다.
  - 특히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카이로 인근뿐만 아니라 이집트 남부와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 해외투자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  - 단, 무바라크 정권과는 달리 무슬림형제단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프라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완료 후에도 정부가 직접 관리할 가능성이 높음.

- 또한 신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 사업 관련 행정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특별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조세, 금융 지원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음.
  - 현재 집권당인 무슬림형제단이 기본적으로 이슬람원리에 기반을 둔 정당이기는 하나 지금으로서는 경제발전이 제1의 당면과제인 만큼, 샤리아법 적용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
- 한편,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적 상황과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특성상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 활동비용은 일정 부문 상승할 것으로 보임.
  - 예고된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과 진출 기업의 이집트산 재화·서비스 사용 강제화 정책은 우리 기업 진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주요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초점을 둔 대이집트협력을 추진 중이며 현재로서는 신정부의 성향과 현지 여건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음.
  -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민간부문에서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구성, 인재육성 및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을 진행 중
  - 중국은 새로운 정권에서 기존의 경제관계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 차관을 늘리고 기술협력을 강화
  -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민주화 및 시민사회 건설에 대한 지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시행 중임.
  - 미국은 무바라크 퇴진 이후 과거 독보적이었던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이 확연히 축소되었지만 양국 모두 서로가 정치·경제적으로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,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.
  - 미국의 대(對)이집트 군사지원과 개발원조 역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.

### 3. 시사점 및 정책 제언

#### 1)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

##### (1) 협력의 다원화

- 기존 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 정부 중심의 중동 협력기반을 민간으로 확대해나가면서 협력을 다원화해야 할 필요

- 이번 정치 변동으로 인해 각국의 기득권층 내부에 균열이 생겼으며 기존의 집중된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게 되었고 앞으로 2~3년간은 내부 정치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지금은 대상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늘려야 할 때임.
  -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는 실제 현재 미국, 일본, EU 등 주요 경제권의 대중동 전략으로, 과거 정부 간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이들 경제권의 대중동 협력 정책 기조가 이제는 해당 국가의 인권 및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지원 및 협력의 형태로 변모하는 중임.

● 같은 맥락에서 대상국의 산업계-학계-정부-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임.

- 지금까지는 양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각 개체가 원활히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부는 오히려 지원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

(2) 제도적 기반 강화

① 주요 협정

● 국가 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 투자, 교역, 비자 제도 등의 재정비가 필요

- 투자보장이 체결된 중동 국가는 현재 15개국,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중동 국가는 현재 15개국,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13개국, 무비자협정은 6개국에 불과
- 현재 EU가 중동국과 고려 중인 비자발급간소화(visa facilitation) 협정 및 재입국협정(readmission agreement) 등에 대한 검토 필요

② 한 · GCC FTA

● GCC와 FTA 체결 재추진

-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현재 GCC 국가의 공동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EU와 유사한 Gulf Union에 대한 언급이 있는 등 경제공동체 도입에 대한 여론 형성
- GCC 국가들이 만약 경제 공동체로 더욱 긴밀해진다면, 교류 중인 EU, 일본, 중국, 호주 등과의 FTA 또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 - 2011년 이후 중국과 일본 등은 GCC와 FTA 재추진에 대한 의지 확인
- 현재 한 · GCC FTA는 제3차 협상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GCC 측이 주요 경제권과의 FTA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일 경우 경제협력 강화 및 현지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우리 역시 GCC와 FTA 체결을 촉진해야 할 것임.
- GCC와의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, 전기전자, 철강 물품에 있어 현지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



### (3) 개발협력 강화

- 우리나라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원으로 중동국에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은 경제개발 컨설팅, 분야별 마스터플랜 수립, 소규모 유학생 지원, 공무원 연수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 프로그램 등임.
  - 현재 진행 중인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대상의 KSP 사업의 예처럼 경제개발 컨설팅은 정치 변동을 겪으며 새로운 행정체계를 세우는 과정에 있거나 실효성 있는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현지 수요와 부합함.
- 한편, 지금까지는 KSP 사업을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었다면 분야별 구체적 액션플랜 수립을 원활히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연구와 행정 체계의 정비 가 필요한 시점
- 역내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정세 안정을 위해 산유국의 비산유국 원조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사우디아라비아, UAE, 카타르 등 산유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산유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
  - 자금력이 풍부한 산유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공적개발원조(ODA)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비산유국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공여국과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.

### (4) 정보의 축적 및 공유

- 아랍의 봄 당시 급박하게 변화하는 중동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향후 전개 상황을 예측하는 우리 연구 인력의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며 중동 기초연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
  - 특히 최근 이슬람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정부가 늘어나고 있어 이슬람 금융과 할랄 등 이슬람 경제 연구에 대한 수요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, 정치변동 이후 새롭게 입안되는 노무정책과 투자 제도 등에 대한 공유 역시 필요한 때임.
- 중동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기초 연구와 현지의 최신 정보를 축적·공유할 수 있는 정부, 연구기관, 기업 간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
  - 중동 지역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구기관의 수를 늘리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.

## 2) 대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 확대방안

-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산업 발전의 기반인 인프라 건설 및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각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국내외 정세 안정에 필요한 방산산업 등에 대한 협력 수요가 재부각

-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대사우디 시장 진출은 상품과 서비스 등의 소비 지출과 인프라 건설 등의 자본 형성에 관련된 부문에 초점을 두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함.
  - 우리와 특히 보완성이 높은 품목은 소비재인 전기전자제품, 의료용품, 식음료품, 알루미늄 제품, 귀금속품 등으로 이들 상품에 대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함.
  - 투자에 있어서는 사우디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전력,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, 공공교통, 의료·보건·미용, 방산 산업, 석유 부문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유망
  - 더불어 최근 사우디정부가 모기지론을 허용하면서 부동산업이 붐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바,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도 늘어날 예정
  - 또한 현지 주식시장인 타다울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준비 중인 만큼 금융업 관련 기회도 앞으로 포착될 것으로 판단
  
- 위 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는 에너지·건설 부문뿐만 아니라 금융, 의료, 인적자원 개발 등,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임.
  - 우리나라는 최대 원유 도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에너지 교섭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중국의 예와 같이 양국의 외교관계를 격상하고 일·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협력 태스크포스 사례처럼 양국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.
  - 한편, 일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개발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‘ODA 졸업국과의 유상 기술협력’이라는 새로운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한 것과 같이 우리도 ODA 지원 대상국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음.

### 3) 대리비아 경제협력 확대방안

- 격렬한 내전을 겪은 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비아 내에서는 의약품, 의류,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 소비재에 대한 수입 수요가 크며,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건설에 관련된 기자재의 수입 및 외국인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임.
  - 또한, 장기간의 독재정권 축출 이후 민주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신정부 구성과 관련한 제도 협력과 경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수요가 있음.
  
- 교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, 건설 중장비, 가열 난방기, 화물자동차, 철강제품 등 건설관련 품목의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할 때임.

- 또한 현재 주력 수출상품은 아니지만 섬유제품, 금속제품, 의료용품, 식료품 등도 보완도가 높아 중소·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와 현지 생산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함.
- 투자 분야에서는 석유개발 및 플랜트, 송유시설, 철도, 주택, 항만, 공항, 전력, 통신 등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 - 따라서 과거 우리 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부진했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리비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관광개발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
- 현재로서는 리비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.
  - 산유국인 리비아는 우리의 개발협력 대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일반 ODA 차원의 지원은 불가하며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현지 내전 당시 가장 타격을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  - 일본 정부가 ‘ODA 졸업국과의 유상 기술협력’이라는 새로운 협력체계안에서 원조 대상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개발협력을 지속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유사한 틀을 구축하여 리비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.
  - 한편, 현재 국제사회가 리비아의 재건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, 신뢰구축을 통한 투자 기회 확보를 위해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사회 공헌이 요구 됨.

#### 4) 대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방안

- 이집트는 인구가 젊고 많으며 유럽, 아프리카,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우리에게 향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의 잠재성이 큰 국가임.
- 이집트 정부의 경제 전략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대이집트 협력 확대의 방향을 기존의 건설이나 에너지 개발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  - 향후 확대될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투자 및 교역구조의 확립이 필요
  - 보고서의 상호 상품보완도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완성이 높은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 등 현행 주력 수출품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섬유제품, 금속제품, 식료품 등 유망 수출품에 대한 현지 생산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.

- 한편, 교역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.
  -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아프리카 지점을 이집트에 설립하여 이집트뿐만 아니라 향후 아프리카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원활히 해야 할 것임.
  - 신정부가 들어선 지금, 양국 정부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야 할 때임.
  
- 2011년 1월 제1차 한·이집트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한·이집트 FTA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므로 추진 고려 필요
  - 한·이집트 FTA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한·이집트 FTA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미미하나,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연구된 바 있음.